9월 12일 '1차 슈퍼위크'…판세따라 후보간 합종연횡

2주 앞 민주당 지방순회경선 변수
이재명·이낙연 첫 격전지 충청 출격
정세균 "이낙연 대권 적임자 아냐"
친문계 움직임·文 지지율도 촉각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지역별 경선투표가 2주 후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반 싸움에서 '1강 1중'이나 '1강 다약'의 구도가 나타날 경우, 후보간 연대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1차 슈퍼위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호남 표심'을 이끌게 될 '추석 민심'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호남 표심은 다음달 말 추석 연휴에 구체화할 것으로 예측돼, '추석 민심'이 사실상 민주당 경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 추석 연휴가 9월 22일까지 이어지는데 광주·전남지역 온라인 투표 시작이 21일이며, 이 지역 권리당원은 추석 연휴기간인 21·22일 자발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추석 밥상 민심'이 광주·전남 표심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경선지역은 충청이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투표에 들어가는 대전·충남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9월 4일 공개된다.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순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초반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12일 치러지는 강원 순회경선에서는 국민과 일반당원 약 70만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처음 공개된다. 이른바 1차 슈퍼위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 중후반대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10%대 지지율로 추격하는 모습이다. 과반을 장담할 정도로 '이재명 대세론'이 확고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결선투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1차 슈퍼위크를 전후로 판세가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면 완주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주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합종연횡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교익 사태'와 '먹방 논란'으로 확대된 이 지사의 '지사직 리스크', 민주주의4.0을 중심으로 친문 강성 인사들의 반이재명 움직임도 경선판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친문계의 움직임과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처럼 40%대의 탄탄한 지지세가 유지된다면 당내 친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대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꺾인다면 중도층을 겨냥한 주자들의 차별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순회경선이 진행될수록 주자들이 자기 색깔을 내면서 선거전이 더욱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1~22일 경선 첫 무대인 충청권에 머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대전과 세종을 잇달아 찾았다. 대전국립현충원 참배로 충청권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 지사는 세종으로 이동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둘러봤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사당을 참배한 뒤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이어 당진, 서산 등 충남 지역을 훑으며 이곳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당심 잡기에 나섰으며, 22일에는 대전을 찾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1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고향인 전북을 찾았다. 전북 방문 이틀째인 이날 전북 익산 중앙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 지역위원회를 방문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보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전 대표를 '그분'으로 호칭하며 "그분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감당할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단일화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에서) 단일화를 스토킹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그분들이 경선 전략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참으로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주말 동안 지방 순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검찰개혁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하는 등 친문 지지층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예술인들과 만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文 운전자론 계승…바이든·김정은 직접 만나겠다"

한반도 평화정책 발표
"조건부 제재 완화 북·미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해법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더 주체적인 중재자·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비핵화 해법으로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스몰딜을 내세웠다. 그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남북 관계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공약도 내놨다.

이 지사는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설득하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고향 방문과 북측 여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40%·윤석열 29%·이낙연 24%

한국갤럽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
양자대결, 이재명 46%·윤 34%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호감도가 40%를 기록,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로 뒤를 이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4%, 최재형 전 감사원장 17% 순이었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1% 포인트)다.

이번 조사에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에 대한 질문엔 이낙연 전 대표가 62%로 가장 높았고,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58%로 동률, 이 지사는 50%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9~11일 실시한 호감도 조사와 5달 뒤 실시한 이번 조사를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은 40%에서 11%포인트 하락해, 호감도 하락 폭이 이 지사(6%포인트), 이 전 대표(7%포인트)보다 컸다. 비호감도도 윤 전 총장은 47%에서 11%포인트 올랐다. 이 지사는 비호감도가 43%에서 7%포인트 올랐고, 이 전 대표는 56%에서 6%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 이 지사의 호감도는 65%였고, 이 전 대표는 41%였다. 진보층 성향 응답자에게선 이 지사가 63%, 이 전 대표가 38%였다. 민주당세가 강한 호남에서 이 지사의 호감도는 49%, 이 전 대표의 호감도는 4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전 총장 호감도는 66%, 최 전 원장은 34%였다. 보수층 성향에선 윤 전 총장이 54%, 최 전 원장이 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윤 전 총장의 호감도는 39%, 최 전 원장은 23%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평가 조사에서는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40%,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4%였다.

한편,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더 좋은지'를 질문한 결과, 이 지사가 46%의 지지율을 얻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4%였다. 한국갤럽이 여야의 가상 양자대결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각각 36%의 지지율을 동률을 보였다. 두 가지 가상대결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세는 비슷한 셈이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